Deloitte Insights

AI-generated Image

November 2026



2026년 미국 중간선거 결과 분석

Trump 2.0 후반기 정책 지형 변화와 한국 산업의 대응

방향은 유지, 속도는 불확실

Deloitte Insights

Deloitte.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목차

I. 2026년 미국 중간 선거 결과와 의미 04

01 선거 결과 : 민주당의 상·하원 동시 탈환 04

02 행정부·의회 권한 변화와 정책 방향 05

03 선거 직후 금융 시장 반응과 향후 전망 05

II. 국내 산업별 영향 분석 07

01 반도체·AI 07

1) 주·지방 규제와 AI 데이터센터 투자 속도 07

2) 연방 세제 변화와 반도체 투자 여건 09

02 자동차·이차전지 10

1) 관세·전동화 규제와 완성차·부품 10

2) 생산지원·공급망 요건과 이차전지 11

03 바이오·제약 13

1) 관세·공급망 재편과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13

2) 약가·건강보험 정책과 바이오시밀러·신약 15

04 조선·방산 16

1) 미국 조선업 재건 정책과 사업 기회 16

2) 해외 건조 제한과 국내 조선소의 참여 범위 18

05 에너지·원전 19

1) 전력 인프라 수요와 전력기자재 19

2) 원전·가스발전 협력과 사업화 변수 20

06 철강 22

1) 미국 관세·무역구제와 대미 수출 여건 22

2) 수요 여건과 수출시장 다변화 제약 24

III. 미국 중간 선거 이후 국내 기업의 대응 방향 26

01 대응의 출발점: 정책 수단별 권한 주체 구분 27

02 산업별 대응 방향: Defend · Adapt · Capture 28

03 시기별 점검: 레임덕 회기에서 새 의회 출범까지 30

04 전사 공통 과제 31

Trump 2.0 후반기
정책 지형 변화와 한국 산업의 대응

방향은 유지, 속도는 불확실

01. 개표 결과 2026년 11월 12일 오전 11시(KST) 기준

하원 (총 435석)

민주당	미확정	공화당
255	12	168

과반 218

상원 (총 100석)

민주당	미확정	공화당
55	1	44

과반 51

출처: 언론사 판정·공식 인증 전

민주당 55석에 민주당 성향 무소속 2석 포함

02. 선거 결과의 의미



트럼프 2.0 정책의 일방적 추진에 제동

- ✓ 관세·수출통제 등 행정부 주도 정책의 방향은 유지
- ✓ 세액공제·예산·인허가 등은 의회·주정부 결정에 따라 속도와 조건이 달라질 전망

03. 한국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정책 변수

행정부 관세 조치 — 유지 가능성 높음

Section 301 [시행 중]

한국산 일반 수입품 12.5% / 한국 포함 16개 경제권 과잉생산 조사 중 → 추가 관세로 이어질 수 있음

Section 232 [시행 중]

자동차 15% · 철강·알루미늄 50% · 특허 의약품 15%(제네릭·바이오시밀러 제외) → 비용 부담 지속

의회 법안·예산 — 실행 속도 불확실

§48D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시행 중]

35% 공제의 착공기한 연장 여부

§45X·PFE 규정 [시행 중]

배터리 생산세액공제 · 중국산 소재 사용 제한

SHIPS Act · FY2027 NDAA · 전력망 인허가 · AI 규제 [입법·심의 중]

통과 여부와 예산 규모 미정

04. 중간선거 전후 산업별 관리 변수 및 관련 조항

산업	관리 변수	핵심 메시지	관련 조항 (현황)
반도체 / AI	관세·예산 복합	• §48D 35% 투자세액공제의 신규·추가 투자 적용 여부가 핵심 변수 • AIDC 인허가·전력비용·AI 규제에 따라 투자·납품 일정 변동 가능	• CHIPS Act·§48D [시행 중] • AI·AIDC 규제 [주별 입법·시행 확대]
자동차 / 부품 / 이차전지	관세·예산 복합	• 한국산 자동차·부품 15% 관세 지속 • §45X 세액공제·PFE 요건이 배터리 수익성과 공급망 재편의 핵심 변수	• Section 232 [시행 중] • §45X·PFE [시행 중]
제약 / 바이오	관세·예산 복합	• 한국산 특허의약품의 15% 관세가 가격·수익성 변수 • 제네릭·바이오시밀러는 현재 관세 제외이나 재검토 가능	• Section 232 [시행 중] MFN 약가·온쇼어링 [시행·협상]
에너지 / 원전	예산·사업조건	• AI데이터센터 전력 수요 확대로 발전·송배전·ESS 투자 기회 확대 • 전력망 투자비 분담·전기요금·인허가가 발주 시점의 핵심 변수	• 전력망 인허가·요금 규제 [연방·주별 논의] • 원전·청정에너지 지원정책 [정책 변화 가능]
조선 / 방산	예산·사업조건	• 미국 조선업 재건으로 협력·현지 생산 기회 확대 • 실제 수주는 해외 건조 허용 범위·국방예산·현지 생산역량에 좌우	• SHIPS for America Act [입법 논의] • FY2027 NDAA·국방예산 [입법·예산 과정]
철강	관세	• 철강·알루미늄 50% 등 차등 관세 부담 지속 • 주요국의 공급 과잉을 문제 삼은 Section 301 조사 진행	• Section 232 [시행 중]

05. 기업 대응전략 2027~2028년 트럼프 임기 후반

미국 현지생산
관세·세액공제·현지조달 요건 반영

공급망 재설계
조달·생산거점 재점검 및 다변화

가격·계약 관리
관세·물류비·환율 변동의 가격·계약 조건 반영

투자계획 조정
법안·인허가 일정에 연계한 투자 시점·규모 조정

지속 모니터링 ▶ Section 301·Section 232 | §48D·§45X 세액공제 | SHIPS Act·NDAA | 연방·주정부 AI 규제

※ 시행 중 법률(Section 232· Section 301, §48D·§45X)과 입법·심의 단계 법안(SHIPS Act, FY2027 NDAA, AI 규제)을 구분 표기 | 출처: AP, USTR, CRS, White House, IRS, KOTRA



I. 2026년 미국 중간 선거 결과와 의미

01 선거 결과: 민주당의 상·하원 동시 탈환

생활비 부담과 이란 전쟁, 이민 단속에 대한 반발이 민주당의 상·하원 동시 탈환으로 이어졌습니다.
다만 대통령의 거부권과 관세·수출통제·이민 등 행정권한은 유지돼, 정책 반전보다 견제와 협상이 확대될 전망입니다.

선거 결과 민주당이 공화당 강세 지역까지 휩쓸며 상·하원 다수당을 동시에 확보

☑ 11월 12일 오전(한국 시간) 집계 기준 상원은 민주 55석(민주당 성향 무소속 포함)·공화 44석, 하원은 민주 255석·공화 168석으로, 상원 1석과 하원 일부 선거구(12석)는 아직 미확정[1]

☑ 최근 50년간 한 번의 선거로 상·하원 다수당이 함께 바뀐 것은 1994년, 2006년에 이어 세 번째[2]

- 공화당 상원 의석 최소 7곳(텍사스·캔자스·오하이오·아이오와·메인·노스캐롤라이나·사우스캐롤라이나)과 조지아·오하이오·아이오와·텍사스 주지사직을 민주당이 탈환
- 최종 결과는 11월 말~12월 초 확정 예정

표심 생활비 부담이 견제 투표로 연결되고 2024년 트럼프 지지층 일부가 이탈

☑ 투표자의 79%가 물가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고, 74%는 이란 전쟁이 투표의 중요 요인이었다고 응답[3]

- 히스패닉 주민이 과반인 카운티에서 공화당 상원 후보 득표율이 2024년 대선보다 22%p 이상 하락

02 행정부·의회 권한 변화와 정책 방향

권한 구조 민주당 의회는 정책을 막거나 늦출 수 있으나 자체 정책을 관철하기는 어려움

☑ 민주당은 예산·조세 법안 심의, 상원 인준, 청문회·조사 권한으로 행정부 견제를 강화

☑ 대통령 거부권을 넘으려면 양원 각각 3분의 2, 상원 일반 법안의 필리버스터 종결에는 통상 60표가 필요해 현 의석으로는 단독 입법이 어려움[4]

정책 방향 관세는 유지, 세액공제·예산·현장 조건은 불확실성 확대

☑ 관세·수출통제·이민 단속은 행정부 권한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음

☑ 세액공제·국방예산은 의회 협상에 따라, 데이터센터 인허가·전기요금은 주정부와 전력규제위원회 결정에 따라 조건과 시점이 달라질 전망[5]

- 조지아 공공서비스위원회(PSC)는 민주당이 20여 년 만에 다수를 확보해 데이터센터 전력망 비용 분담 심사가 쟁점화[6]
- 기업은 관세를 상수로, 세액공제·예산·주별 규제를 변수로 관리할 필요

03 선거 직후 금융 시장 반응과 향후 전망

금리·환율 국채금리 하락, 원/달러 환율은 보합권

☑ 미국 10년물 금리는 11월 3일 4.907%에서 11월 5일 4.835%로, 한국 10년물은 4.00%에서 3.89%로 하락[7]

☑ 원/달러 환율은 미국 금리 하락(원화 강세 요인)과 글로벌 위험회피(원화 약세 요인)가 상쇄되며 1,340원대 초반 유지

증시 11월 5일 급락 후 6일 반등, 정책 기대보다 AI 수익성을 확인하는 국면

☑ 11월 5일 S&P500 -4.36%, 나스닥 -5.52%로 급락했으며, 국내 코스피(-5.28%)·코스닥(-5.11%)도 동반 하락[8]

- 민주당 승리와 주 단위 데이터센터 규제가 AI 인프라 투자 속도를 늦출 수 있다는 우려가 매도의 배경

☑ 11월 6일에는 S&P500 +0.31%, 나스닥 +1.1%, 필라델피아 반도체지수 +4.2%로 일부 반등[9]

지표	선거 직후 변화	의미
미국 10년물	4.907% → 4.835%(11/3→11/5)	재정확대 기대 약화·안전자산 수요
한국 10년물	4.001% → 3.887%(11/3→11/5)	미 금리 하락에 동조
미국 증시	11/5 급락 → 11/6 일부 반등	AI 규제 우려와 실적 기대 공존
국내 증시	11/5 코스피 -5.28%	외국인 매도·기술주 변동성 확대

2027년 금리 하방 요인은 있으나 하락 폭은 제한적

☑ 민주당 의회의 재정확대 견제는 장기금리와 달러의 하방 요인이 될 수 있으나, 연준 정책·구조적 재정적자·국채 차환 수요·지정학 리스크가 남아 금융여건 개선 폭은 제한적일 전망[10]

☑ 국내 금리는 미국 금리 하락의 영향을 받되 한국은행 통화정책, 물가·성장률, 국채 수급에 따라 차별화될 전망

2027년 환율 달러 약세 압력 속 변동성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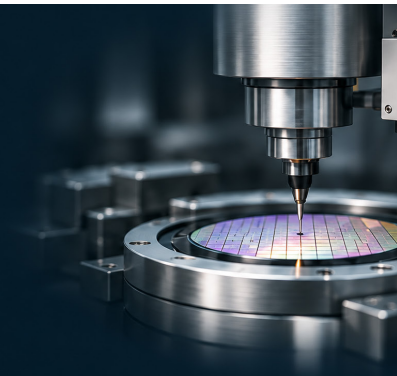
☑ 외국인 자금 흐름, 반도체 수출 경기, 지정학 위험이 원/달러 변동성을 결정할 전망

- 원화 강세는 수입비용을 낮추지만 수출기업의 원화 환산 수익에는 부담

II. 국내 산업별 영향 분석

01 반도체·AI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과 주정부 교체로 AI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 가능성이 부각됐습니다. 다만 AI 투자 자체가 중단되기보다는 프로젝트별 착공·전력 연결이 늦어지면서 HBM·서버용 메모리의 납품 시점 불확실성이 커질 전망입니다.



1) 주·지방 규제와 AI 데이터센터 투자 속도

정책 변화와 데이터센터 투자	규제 강화 가능성은 커졌으나, 반도체 수요 감소로 단정하기는 어려움

☑ 골드만삭스는 데이터센터 규제 강화로 미국 내 계획된 데이터센터 증설 용량의 약 45%가 영향권에 놓일 수 있다고 추정[11]

- 45%는 실제 취소 규모가 아니라 규제 변화의 잠재적 영향권에 있는 계획 증설 용량의 비중

☑ 민주당은 양원 다수당을 확보했으나 대통령 거부권을 재의결할 3분의 2 의석에는 못 미쳐, 행정부의 AI 산업정책이 전면 바뀌기는 어렵다는 평가[12]

- 중간선거가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방향을 크게 바꾸지는 않겠지만, AI 규제와 투자 속도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분석[13]
- 국내 AI·반도체 산업에 대한 실질 영향은 의회 구성 변화 자체보다 향후 규제·세제 조치가 미국 AI 인프라 투자 계획에 얼마나 반영되는지에 달려 있음

주·지방 규제 데이터센터 착공·가동 지연으로 메모리 납품 시점 변동 가능성

☑ 데이터센터 모라토리엄을 공약한 민주당 후보가 텍사스·조지아 주지사에 당선되면서 신규 프로젝트 심사 강화와 건설·확장 지연 가능성이 높아짐

☑ 텍사스는 2030년까지 미국에서 신규 가동될 데이터센터 용량의 약 25%를 차지할 것으로 추정되며, 주지사 당선인은 주민 보호 규칙이 마련될 때까지 신규 데이터센터 승인을 중단하겠다고 공약

☑ 데이터센터 착공·가동이 늦어지면 AI 서버·가속기 도입 시점도 밀려, HBM·서버용 메모리의 공급 일정과 매출 인식 시점이 늦어질 수 있음

- 다만 개별 프로젝트 지연과 반도체 구매 축소는 별개의 사안으로, 고객이 투자 지역을 옮기거나 기존 시설을 증설할 수 있어 실제 발주 감소로 이어지는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



2) 연방 세제 변화와 반도체 투자 여건

데이터센터 과세 세제 혜택 축소 논의로 빅테크의 AI 인프라 투자 부담 확대 우려

☑ 론 와이든 상원의원(민주)은 2026년 10월 데이터센터 자산의 100% 보너스 감가상각(투자 초기 일시 비용처리) 폐지와, 클라우드·AI 연산 등 데이터센터 서비스 매출에 대한 연방 소비세 신설을 담은 법안 초안을 공개[14]

- 감가상각 혜택 폐지는 법 시행 이후 가동되는 자산이 대상이며, 소비세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음

☑ 민주당이 상원을 확보하면서 와이든 의원이 내년 상원 재무위원장을 맡을 가능성이 커져, 관련 세제 개편 논의가 힘을 얻을 수 있음[15]

☑ 세제 부담이 커지면 일부 AI 인프라 프로젝트의 사업성과 집행 시기에 영향을 미쳐, HBM·서버용 메모리의 중장기 수요 전망에도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음[16]

- 다만 대통령 거부권이 있어 법안의 실제 제정 여부는 불확실

반도체 투자세액공제 제조업 지원에 대한 초당적 협력은 미국 현지 투자에 긍정적

☑ 반도체·조선·전력 분야 산업 지원은 민주당의 의회 장악 이후에도 초당적 협력이 가능한 분야로 평가[17]

☑ 상원 재무위원회 공화·민주 지도부(크레이포 위원장·와이든 간사)는 2026년 말 착공기한이 끝나는 반도체 투자세액공제(§48D, 35%)의 연장을 공동 지지[18]

- 기한이 연장되면 미국 내 신규·추가 생산시설을 추진하는 국내 반도체 산업의 세 부담이 줄어, 투자비 회수 기간 단축과 후속 설비투자 확대에 긍정적

02
자동차·이차전지

기존 친환경차 구매지원의 복원은 어렵고 온실가스·연비 규제는 완화된 가운데, 기존 관세와 미국 내 생산지원·공급망 요건이 자동차·배터리 산업의 핵심 변수입니다. 미국 현지 생산기반과 적격 공급망을 확보했는지에 따라 산업 내 영향이 차별화될 전망입니다.



1) 관세·전동화 규제와 완성차·부품

관세 자동차·부품 관세 부담은 지속

☑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관세는 2026년 2월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화됐으나, Section 232·Section 301 등 별도 통상조치는 영향을 받지 않음[19]

☑ 한국산 자동차·부품에는 기본관세와 Section 232 추가관세를 합산해 총 15%의 관세율이 적용

- 미국 내 최종조립 차량의 제조사는 권장소비자가격(MSRP) 합계의 3.75%를 부품 관세에서 상쇄받을 수 있으며, 해당 제도는 2030년 4월 말까지 적용[20]

☑ 관세가 유지되면서 한국 생산·수출 비중이 높은 완성차·부품 산업의 통상 부담은 지속되는 반면, 미국 현지 생산 완성차는 부품 관세 상쇄제도로 부담을 일부 완화 가능

- 현지에 동반 진출한 부품·소재 산업도 미국 내 생산·조달 확대 과정에서 상대적인 사업 기회 예상



전동화 규제 온실가스·연비 규제 완화로 단기 전동화 압력 약화

☑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6년 2월 차량 온실가스 배출기준의 법적 근거인 2009년 위해성 판단(Endangerment Finding)을 철회하고 모든 차량 온실가스 기준을 폐지했으며(4월 20일 시행), 일반 대기오염물질 규제는 유지[21]

☑ 기업평균연비규제(CAFE)의 미달 과징금이 2025년 7월 감세법(P.L. 119-21)으로 0달러로 조정되면서 제조사의 연비 개선 유인이 낮아짐[22]

- CAFE는 완성차 업체 차량군의 평균 연비 목표를 정하고 기준 미달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제도
- 단기 규제 압력은 낮아졌으나, 향후 입법·규칙 변경에 따라 전동화 사업 환경이 다시 달라질 수 있어 정책 불확실성은 지속

2) 생산지원·공급망 요건과 이차전지

전기차 구매지원은 종료됐고 단기간 내 복원도 어려운 반면 미국 내 생산세액공제(§45X)는 유지돼, 금지 외국기업(PFE) 요건을 충족하는 공급망과 ESS 등 새로운 수요처 확보가 이차전지 산업의 핵심 과제

구매지원 친환경차 구매지원 복원 가능성은 제한적

☑ 신차(§30D)·중고차(§25E)·상업용(§45W) 친환경차 세액공제는 2025년 9월 30일 이후 취득 차량부터 종료[23]

☑ 구매지원을 되살리려면 신규 입법이 필요하나, 상원 필리버스터(60표)·재정 부담·대통령 거부권으로 대규모 복원에는 제약 예상[24]

- 지원이 복원되더라도 적용 대상과 생산·조달 요건은 신규 입법에서 정해질 사안으로, 현 단계에서 영향을 단정하기 어려움

생산지원·공급망 §45X 유지 속 PFE 요건이 공급망 적격성의 핵심 변수

☑ 첨단제조 생산세액공제(§45X)는 미국 내 적격 생산을 중심으로 유지되나, 배터리 셀·모듈 등 부품의 공제율은 2030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25]

- 미국 내 생산기반을 확보한 배터리 산업은 §45X를 활용할 수 있어 현지 생산의 중요성은 지속

☑ 금지외국기업(PFE)으로부터의 실질적 지원(material assistance) 제한으로 공급망 적격성 관리와 비중국산 소재·핵심광물 조달의 중요성이 확대[26]

- 중국산 소재 의존도가 높은 경우 대체 조달처 확보와 적격성 입증·추적에 따른 공급망 관리 부담이 커질 가능성

수요처 다변화 전기차 수요 둔화 속 ESS 중심의 수요처 확대

☑ 전기차 수요 둔화에도 전력망 투자와 AI 데이터센터 확대가 에너지저장장치(ESS) 수요의 성장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27]

- 다만 중국 업체의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원가 우위는 경쟁 부담으로 작용하며, 데이터센터 전력망 증설비용 분담과 송전망 인허가 등 정책 변화도 함께 점검할 필요



03
바이오·제약

중간선거 이후에도 의약품 관세와 미국 내 생산 확대, 중국 바이오 견제 기조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에는 공급망 재편이 기회로, 바이오시밀러와 신약에는 약가 인하·건강보험 정책이 기회와 부담으로 함께 작용해 사업모델별 영향이 엇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1) 관세·공급망 재편과 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의약품 관세	즉각 철회보다 적용 범위·예외 기준의 불확실성 지속

☑ 2026년 4월 Section 232에 따라 특허의약품·원료에 최대 100% 관세가 부과됐으나, 한국산은 한미 합의에 따라 15%가 적용되고 제네릭·바이오시밀러는 관세 대상에서 제외[28]

- 제네릭·바이오시밀러 제외는 확정된 면제가 아니라, 상무장관이 2027년 4월까지 관세 필요성을 보고하도록 한 잠정 조치
- 항체-약물 접합체(ADC)·세포유전자치료제·희귀의약품 등은 무관세 적격국 생산 시 0% 적용[29]

☑ 민주당 의회는 관세의 적용 품목, 예외 기준, 미국 내 생산시설 투자 조건 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수 있으나, 대통령이 Section 232 등 위임 권한을 활용할 수 있어 관세 정책의 즉각적인 철회는 어려움

☑ 중간선거 이후에도 미국 내 의약품 공급망 강화와 자국 생산 확대 기조가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미국 현지 생산시설 확보와 사업 기반 강화 필요성은 지속

- 국내 CDMO 산업은 미국 현지 생산시설 인수 등으로 관세 리스크에 대응하고 현지 고객 접근성과 공급망 안정성을 높이는 중이나, 인수·설비투자 비용 부담은 함께 증가

생물보안법 중국 바이오 견제는 초당적 기조로 유지, 국내 CDMO에는 점진적 대체 수요 기회

☑ 생물보안법(BIOSECURE Act)은 2025년 12월 18일 202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Section 851로 제정됐으며, 연방기관이 '우려 바이오기업'의 장비·서비스를 조달하거나 이를 사용하는 기업과 계약·보조금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30]

☑ 법에 특정 기업명은 명시되지 않았으며, 우려 바이오기업은 국방부의 중국군사기업 목록(1260H)과 관리예산처(OMB) 지정 절차로 정해지고 OMB는 2026년 12월 18일까지 최초 목록을 공개해야 함[31]

- 주요 중국 CDMO는 현재 규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며, 추후 지정되더라도 기존 계약에는 5년의 유예기간이 적용[32]

☑ 주요 중국 CDMO가 우려 기업으로 추가 지정되거나 글로벌 제약사의 공급망 다변화가 확대될 경우 국내 CDMO 산업의 대체 생산 수요 확보 기회가 커질 가능성

- 다만 규제가 연방정부 조달·지원 사업 중심으로 적용되고 기술이전·품질 검증에 시간이 걸려, 민간 시장의 대체 수요는 제한적이고 점진적으로 나타날 전망

2) 약가·건강보험 정책과 바이오시밀러·신약

약가 정책 약가 인하 압력은 양당 공통 과제로 지속

☑ 민주당의 의회 다수당 확보로 인플레이션감축법(IRA)에 따른 메디케어 약가 협상 대상 확대 등 추가적인 약가 인하 입법 논의가 추진될 가능성

☑ 트럼프 행정부는 주요 선진국 약가를 미국 의약품 가격에 연동하는 최혜국 약가(MFN) 정책을 추진 중이며, 약가 합의와 미국 내 생산 합의를 함께 체결한 기업에는 2029년 1월 20일까지 의약품 관세를 면제[33]

- 민주당 의회가 MFN 합의의 투명성과 실효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할 수 있으나, 약가 부담 완화라는 양당의 공통 과제를 고려하면 약가 인하 압력은 지속될 가능성

☑ 오리지널 의약품의 가격 인하 압력과 바이오시밀러 경쟁 촉진 환경은 가격·품질 경쟁력을 갖춘 국내 바이오시밀러 산업에 우호적

- 다만 약가 인하가 확대되면 바이오시밀러의 판매가격 하락과 가격경쟁 심화로 수익성이 낮아질 수 있으며, 신약·기술수출은 미국 약가 변동에 따른 마일스톤·로열티 가치 변화 점검이 필요

건강보험 ACA 보조금 복원 여부가 미국 의약품 수요의 변수

☑ 건강보험개혁법(ACA) 확대 보험료 세액공제가 2025년 말 종료된 이후, 2026년 2월 ACA 마켓플레이스 실효 가입자는 1,920만 명으로 전년 대비 약 12~13% 감소했으며 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 부담은 113달러에서 178달러로 약 58% 증가[34]

☑ 다만 미국 보건복지부(HHS)는 가입자 감소의 상당 부분을 부정 가입 정리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어, 보조금 종료의 영향 규모에 대한 해석은 엇갈림

☑ 민주당의 의회 다수당 확보로 확대 보험료 세액공제의 연장·복원 논의가 다시 힘을 얻을 가능성

- 복원 시 보험 가입 유지와 처방의약품 접근성 개선으로 의약품 수요 회복에 긍정적이나, 무산·지연 시 가입자 감소와 처방 위축으로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에 부담 요인

04
조선·방산



미국 조선업 재건과 중국 해양 견제는 초당적 공감대가 형성된 분야로, 국내 조선·방산 산업의 미국 시장 진출 기회는 유지될 전망입니다. 다만 민주당 의회는 미국 내 생산·고용을 중시해 해외 건조를 제한하고 있어, 국내 조선소의 직접 건조보다 미국 현지 생산 연계 모델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미국 조선업 재건 정책과 사업 기회

초당적 기조	조선업 재건·해양안보에 대한 초당적 공감대로 협력 기회 유지

☑ 민주당이 상·하원 다수당을 확보하면서 2027년 1월 출범하는 제120대 의회에서 상임위원회 운영, 예산 심의, 행정부 조사·감독 권한이 강화될 전망[35, 36]

☑ 다만 대통령 거부권으로 행정부의 기존 산업정책이 전면 변경될 가능성은 제한적

☑ 미 해군 전투함 규모는 293척(2025년 10월)으로, 381척 확보 목표는 '골든 플릿'(Golden Fleet) 목표로 대체될 예정이어서 중장기 함정 건조 수요는 지속될 전망[37]



현지 생산 기회 미국 현지 조선소를 중심으로 미 해군 함정 수주 가시화

☑ 2026년 10월 국내 조선업계의 미국 현지 조선소가 미 해군·해병대용 중형상륙함(LSM) 1척을 약 2억 6,900만 달러에 수주했으며, 추가 3척의 옵션이 포함[38]

- 해당 조선소 첫 미 해군 함정 건조 계약으로, 2027년 4분기 착공해 2030년 첫 인도가 목표이며 LSM은 총 35척 도입이 계획됨[39]

☑ 미국 조선업 재건을 위한 초당적 법안인 SHIPS for America Act의 주요 조항이 국방수권법(NDAA)에 반영될지 여부가 향후 입법의 핵심 변수[40]

- 국방수권법(NDAA): 미 의회가 매년 제정하는 법률로, 국방부의 예산 사용 권한과 국방정책의 주요 방향을 규정
- SHIPS for America Act: 상선 건조능력, 조선소 생산역량, 해운 경쟁력과 해양안보 강화를 위해 양당 의원이 공동 추진한 법안[41]

2) 해외 건조 제한과 국내 조선소의 참여 범위

해외 건조 제한 의회 견제로 국내 조선소의 미 해군 함정 직접 건조 범위 제약 지속

☑ 현행법(10 U.S.C. § 8679)은 미 해군 함정과 선체·상부구조 주요 구성품의 해외 건조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대통령의 국가안보상 예외만 허용[42]

☑ 하원은 해외 조선소에서 건조한 전투함 조달에 2027회계연도 예산 사용을 금지하는 재러드 골든 의원(민주)의 수정안을 포함한 NDAA를 7월 통과[43]

☑ 상원 군사위원회안은 대통령의 국가안보 예외 권한을 삭제하는 대신, 급유함·벌크연료선·로로선 등 지원함에 한해 동맹국 조선소 건조를 함급당 최대 2척까지 허용('핀란드 모델')[44]

- 해외 건조는 미국 조선소에 대한 직접투자와 후속 함정의 미국 내 건조를 조건으로 하며, 양원 최종안은 협상 중이고 연말 처리는 현 제119대 의회가 맡음

사업모델 전환 국내 건조보다 현지 투자·생산 연계 모델의 중요성 확대

☑ 국내 조선소의 직접 건조 제약이 이어질 경우 미국 현지 조선소 투자와 후속 함정의 현지 생산을 연계한 사업모델이 미 해군 시장 진출의 핵심 경로

☑ 민주당 주도 의회에서 미국 내 생산·고용 중심의 지원정책이 구체화되면 현지 조선소를 확보한 국내 조선업계를 중심으로 함정 건조·정비(MRO), 설비 현대화, 기자재 공급 참여가 확대될 수 있음

- 다만 실제 수혜는 NDAA와 국방예산의 최종 확정 결과에 달려 있으며, 수주한 계약을 적기에 이행할 현지 생산능력과 숙련 인력 확보가 관건

05
에너지·원전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에도 행정부 주도의 관세·에너지 정책이 단기간에 크게 바뀔 가능성은 제한적입니다. AI 데이터센터와 노후 전력망 교체로 전력 인프라 투자는 이어질 전망이나, 국내 산업의 수주 성과는 개별 사업의 추진 단계와 관세·인허가·현지조달 요건에 따라 차이가 날 것으로 보입니다.



1) 전력 인프라 수요와 전력기자재

전력망 투자 구조적 수요는 지속되나 지역별 발주 여건은 차이

☑ 미국 민간 전력회사 51개사가 2030년까지 발전·송배전 등에 약 1.4조 달러의 설비투자를 계획하고 있어 변압기·개폐기·케이블 등 전력기자재 수요 확대 예상[45]

☑ 전력 공급 안정성은 초당적 관심 분야로, 송전망 인허가 개선과 계통접속·비용배분 규정 정비 논의가 확대될 전망[46, 47]

- 데이터센터의 전력망 증설비용 분담 기준과 인허가 절차의 지역별 차이가 프로젝트 착공과 기자재 발주 시점에 영향

관세·조달 품목별 관세와 현지 조달 요건에 따라 수익성 차이

☑ 2026년 4월 Section 232 개편으로 금속 원소재 등은 50%, 파생제품은 25%가 적용되며, 일부 금속 집약 산업·전력망 장비는 2027년 말까지 15%의 한시 인하 세율 적용[48]

- 15% 인하 세율은 10MVA 초과 액체절연 대형 변압기(HS 8504.23) 등 일부 품목에 한정되므로, 배전용 변압기·케이블 등은 품목별 적용 세율 확인이 필요[49]

☑ 관세 외에도 현지 안전인증, 벤더 등록, 유지보수 체계 등 발주처의 조달 요건 충족 여부가 북미 시장 수주 경쟁력을 좌우[50]

공급 품목 다변화 데이터센터 전력설비로 공급 영역 확대 기회

☑ 기존 송변전 기자재 외에 데이터센터 내부 배전반·UPS·ESS·전력변환장치(PCS) 등으로 공급 영역 확대 가능[51]

- 제품별 안전인증, 발주처 승인, 납기 대응과 현지 서비스 역량 확보가 국내 전력기기 산업의 사업 참여를 좌우하는 변수

2) 원전·가스발전 협력과 사업화 변수

원전 한미 협력은 구체화됐으나 실제 수주는 개별 사업 조건에 좌우

☑ 한미 양국은 미국 내 대형원전 8기(APR1400 2기·AP1000 6기)를 최대 1,200억 달러 규모로 건설하는 협력 프레임워크에 합의[52]

- 다만 부지·사업구조·건설 일정과 상업 조건은 추가 구체화가 필요해, 수주 규모와 시점은 사업별 추진 조건에 따라 달라질 전망

☑ 미 에너지부(DOE)는 AP1000 10기의 장주기 기자재 구매를 지원하는 175억 달러 규모의 조건부 대출 약정을 발표했으며, 기술·법률·환경·재무 조건을 충족해야 실제 대출이 집행됨[53]

- 미국 원전 공급망 재건 과정에서 설계·시공·기자재 공급 참여 기회가 커지고, 한미 협력을 기반으로 제3국 공동 진출 가능성도 기대



가스발전·LNG 텍사스 발전사업은 추진, 알래스카 LNG는 검토 단계

☑ 제1호 한미 전략투자 사업인 텍사스 엔시널 가스복합발전(223억 달러·6,472MW)은 2029년 1단계, 2032년 전체 상업운전이 목표로, 국내 산업의 발전기자재·EPC·운영·정비(O&M) 참여 기회[54]

- 미국 측은 유사 사업에서도 터빈 등 한국산 기자재의 공급 기회를 제공할 의향을 밝혀 후속 사업 진출 가능성 확대

☑ 알래스카 LNG는 양국이 사업성 검토에 착수하기로 합의한 단계로, 자금조달·장기 구매계약·인허가 조건에 따라 후속 투자 여부와 참여 시기·규모가 달라질 전망[55]

재생에너지 세액공제 재검토 논의 가능성, 실제 제도 변경은 불확실

☑ 민주당의 양원 장악으로 풍력·태양광 세액공제 연장과 지원제도 재검토 논의가 확대될 수 있음[56]

- 다만 대통령 거부권과 현행 세제의 조기 종료 규정으로 실제 변경에는 제약이 있어, 현행 착공·가동 요건과 ESS의 별도 세액공제 적격성을 구분해 사업성을 검토할 필요[57]

06
철강



민주당의 상·하원 장악에도 미국의 철강 고율 관세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으며, 정책 변화는 관세 인하보다 의회의 감독 강화와 품목별 무역구제에서 먼저 나타날 전망입니다. 한국산 수입 급증이 추가 규제 압력으로 이어지는 가운데 EU 수입규제로 시장 전환도 쉽지 않아, 제품별 수익성 관리와 현지 생산 대응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1) 미국 관세·무역구제와 대미 수출 여건

관세	고율 관세는 유지되고 변화는 의회의 감독 강화에서 먼저 나타날 전망

☑ 철강 관세는 Section 232에 따른 대통령 권한에 기반하므로, 의회의 영향은 관세 예외·감면 운용과 행정부 집행에 대한 감독에서 먼저 나타날 전망[58, 59]

- 철강노조(USW)와 철강 생산지역의 지지 기반을 고려하면 의회의 감독은 관세 철폐보다 수요산업의 비용 부담, 품목 분류, 예외 운영의 적정성에 집중될 가능성[60]

☑ 관세 구조는 선거 이전에 이미 2026년 4월 원소재 50%·파생제품 25%로 개편됐고, 6월에는 일부 산업장비의 15% 한시 특례(2027년 말까지) 적용 범위가 확대[61]

- 2027년의 정책 변수는 일률적인 관세 인하가 아니라 한시 조치의 연장 여부와 제품별 적용 요건

무역구제 한국산 수입 급증으로 품목별 무역구제 (Trade Remedy)압력 확대

☑ 2025년 10월~2026년 9월 미국 전체 철강 수입은 전년 대비 13.4% 감소했으나 한국산은 395.7만 NT로 44% 증가해 최대 공급국이 됐으며, 9월 한국산은 51.9만 NT로 전체 수입의 약 22%를 차지[62]

- 같은 기간 캐나다(-40%)·브라질(-21%)·멕시코(-32%)산이 크게 줄어 경쟁국 이탈에 따른 반사이익으로 추정되나, 같은 품목에서 일대일로 대체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 9월 미국 철강업계 연합(AISI·USW 등)은 한국산에 대한 국가별 저율관세할당(TRQ) 도입과 수입 급증 조사를 요구했으며, 3월에는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을 대상으로 제조업 생산능력 과잉 관련 Section 301 조사가 개시[63, 64]

- 업계의 조사 요구와 정부의 Section 301 조사는 별개의 절차이며, 추가 관세 부과는 아직 확정되지 않음

☑ 11월 5일 한국산 일반 용접강관 반덤핑 행정재심에서 기업별 덤핑마진이 0~4.20%로 판정됐고, 한국산 소재를 태국에서 가공한 내식강판에 대해서도 4월 우회조사가 개시[65]

- 모두 선거 이전부터 진행된 절차이며, 같은 품목에서도 기업별 부담이 달라 한국산 철강 전체에 동일한 통상 부담을 적용해 판단하기는 어려움

2) 수요 여건과 수출시장 다변화 제약

미국 수요 인프라 투자가 일부 제품 수요를 뒷받침하나 직접 수출로의 연결은 제한적

☑ worldsteel은 비주거 건설과 에너지·산업 인프라 투자를 바탕으로 미국 철강 수요가 2026년 9,270만 톤에서 2027년 9,410만 톤으로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66]

- 2026년 1~7월 한국의 대미 철근 수출은 전년 대비 약 36배, H형강은 149%, 강관은 31% 늘었으나 증가분 전체를 데이터센터 수요로 설명하기는 어려움[67]

☑ 데이터센터 건설 제한을 주장한 민주당 후보가 텍사스·조지아 주지사에 당선되면서 기존 수요 전망에 반영되지 않은 인허가·착공 지연 위험이 부각[68]

- 연방 재정지원 인프라 사업의 철강재는 바이아메리카(BABA) 규정에 따라 최초 용해부터 코팅까지 미국 내 제조가 원칙이어서, 직접 수출 여부는 프로젝트의 재원과 조달 조건에 따라 달라짐[69]

☑ 2026년 1~9월 미국 조강생산은 6,490만 톤으로 5.8% 늘어 수입 감소와 자국 생산 증가가 함께 나타나고 있어, 미국 수요 회복이 한국산에 동일한 기회를 제공한다고 보기 어려움[70]

- 국내 철강·자동차 업계가 합작한 루이지애나 전기로 제철소(연산 270만 톤, 자동차용 강판 중심)가 2026년 9월 착공해 2029년 상업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 2029년 이후에는 현지 생산에 따른 공급구조 변화를 별도로 고려할 필요[71]

수익성 수출물량 증가에도 제품별 수익성은 엇갈림

☑ 2026년 1~8월 미국의 한국산 철강 수입물량은 52.1% 늘었으나 통관금액은 18.6% 증가에 그쳐, 고율 관세 속에 현지 가격과 수급에 따라 제품별 수익성이 다르게 나타남[72]

- 국내 업계는 50% 관세로 철근은 수익성 확보가 어려워 2027년 수출물량 조절을 계획한 반면, H형강은 현지 가격 상승과 미국 업체의 납기 지연으로 상대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평가[73]

제3국 시장 글로벌 공급과잉과 EU 규제로 수출시장 전환에 제약

☑ OECD는 세계 철강 과잉 생산능력이 2028년 7억 4,500만 톤에 이를 것으로 전망해, 미국 수출을 줄이더라도 다른 시장으로 물량을 전환하기 쉽지 않은 상황[74]

☑ EU는 2026년 7월부터 전체 무관세 쿼터를 3,382만 톤에서 1,835만 톤으로 46% 줄이고 초과 물량 관세를 50%로 인상했으며, 한국 전용 쿼터는 258.1만 톤에서 207.3만 톤으로 19.7% 감소[75]

- 국가 간 경쟁 방식의 공용쿼터(한국 접근 가능 147.5만 톤)를 활용할 수 있으나 실제 확보 물량은 불확실

☑ 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2026년 수입분부터 적용되며 인증서 구매와 최초 신고는 2027년에 진행[76]

- 미국의 관세와 EU의 쿼터 초과 관세·탄소비용은 적용 기준이 달라, 시장별 경쟁력은 명목 관세율뿐 아니라 제품별 공급 자격, 실제 판매가격, 비용 부담 주체를 구분해 판단할 필요

III. 미국 중간 선거 이후 국내 기업의 대응 방향

중간선거는 미국 통상·산업정책의 방향을 바꾸기보다, 입법·예산과 정책 집행의 여건을 바꾸는 변수입니다. 국내 기업에 필요한 것은 정책 방향의 예측이 아니라, 정책 수단별 권한 주체를 구분하고 시나리오별 실행 옵션을 미리 준비하는 것입니다.



정책 방향

관세·수출통제는 유지, 재정지원은 추진 속도와 조건의 불확실성 확대

- ☑ 민주당이 상·하원을 동시에 확보했으나, Section 232·Section 301 관세와 수출통제는 기존 법률에 근거한 행정부 권한이어서 의회 구도와 관계없이 상당 부분 유지 가능
- ☑ 반면 세액공제·보조금·국방예산 등 새로운 재정지원은 의회의 입법과 예산 승인이 필요해, 2027년 이후 추진 속도와 조건의 불확실성이 확대



01 대응의 출발점: 정책 수단별 권한 주체 구분

권한 구조 관세·무역규제는 행정부, 세제·예산은 연방 의회, 인센티브·전력·인허가는 주정부가 주도

☑ 2026년 2월 연방 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관세 부과 권한이 없다고 판결해 상호 관세가 무효화[77]

- Section 232 관세는 판결과 무관하게 유지됐고, 행정부는 Section 232·Section 301 중심으로 관세정책을 재편[78]

☑ 민주당 의회는 관세의 물가·중소기업 영향에 대한 청문회와 자료 요구를 확대할 전망이나, 대통령 거부권을 무력화하려면 양원 각각 3분의 2 찬성이 필요해 기존 관세의 철회 가능성은 제한적[79]

☑ 이번 선거에서 36개 주 주지사와 46개 주 주의회 6,139석도 함께 선출돼, 공장 인센티브·전기요금·데이터센터 인허가 등 주별 사업 환경도 재편[80]

표 1. 정책 수단 별 권한 주체와 대응 기조

정책 수단	주도 주체	선거 이후 전망	대응 기조
관세·수출통제	행정부(의회 위임)	Section 232·Section 301 유지, 품목별 예외·적용범위 조정 중심	완화 기대 없이 '상수'로 관리
세액공제·보조금	연방 의회	§48D 연장, EV 공제 복원 등 신규 입법은 협상 지연	복원 기대 없이 '변수'로 관리
국방예산·NDAA	연방 의회	함정 해외 건조 범위·조선소 보조금은 최종안에서 결정	최종안 확정 전 보수적 수주 계획
인센티브·전력·인허가	주정부	주지사·주의회 구도에 따라 지역별 차별화	투자 주별 정치 구도 상시 점검

02 산업별 대응 방향: Defend · Adapt · Capture

최우선 관리 반도체·AI, 자동차·이차전지, 바이오·제약은 방향과 속도를 함께 관리

- 반도체는 신규·추가 투자에 대한 투자세액공제(§48D, 35%)의 2026년 말 착공기한 연장 여부를 점검하고, CHIPS 보조금 수령 시 10년간 중국 내 첨단 생산 확대 제한 조건을 확인[81]

- 자동차는 미국 현지생산 시에도 차량가 3.75% 한도를 넘는 부품 관세가 남고, 배터리는 금지외국기업(PFE) 요건이 §45X 세액공제 자격을 좌우[82]

- 바이오·제약은 한국산 특허의약품 15% 관세, 최혜국 약가(MFN) 정책, 제네릭·바이오시밀러 관세 제외 재검토가 사업모델별로 다르게 작용[83]

시점 관리 조선·방산, 에너지·원전은 방향은 우호적이나 예산·인허가 일정이 불확실

- 함정 해외 건조는 하원(전투함 조달 금지)과 상원 군사위원회(지원함은 함급당 최대 2척 허용)의 입장이 엇갈려 연말 국방수권법(NDAA) 협상에서 범위가 결정되며, 미국 조선소 투자와 후속 함정의 현지 건조가 참여 조건[84]

- 데이터센터 전력 사용은 2030년 미국 전체의 9.5~15.3%에 이를 수 있으나, 주민 반대와 전기요금 부담이 양당 공통 쟁점으로 부상해 전력망 투자비 배분이 발주 시점의 변수[85]

구조 대응 철강은 관세 완화를 전제하지 않는 생산·제품 구조 전환이 필요

- Section 232 관세는 원소재 50%, 파생제품 25%, 일부 산업장비 15%(2027년 말까지)로 차등 적용되며, 한국을 포함한 16개 경제권의 제조업 생산능력 과잉에 대한 Section 301 조사도 진행 중[86]

표 2. 산업별 대응 과제

산업	Defend (방어)	Adapt (조정)	Capture (선점)
반도체·AI	§48D 착공기한· CHIPS 중국 제한 조건 점검	2단계 관세·상쇄 요건, 주별 전력 여건 반영	메모리·전력·냉각 포함 AI 인프라 공급
자동차·부품	상계 한도 초과 부품 관세, 커넥티드카 협력사 점검	미국·멕시코 생산 시나리오, 파워트레인 믹스 조정	하이브리드 라인업 강화
이차전지	§45X 금지외국기업 요건 점검	미국 공장 일부 라인 ESS 전환	데이터센터·전력망용 ESS
에너지·원전	인허가·금융 지연 대비 일정 관리	전기요금·증설비용 배분 구조 반영	변압기·SMR· LNG 밸류체인 진입
조선·방산	NDAA 최종안 전 보수적 수주 계획	현지 조선소 투자· 핀란드 모델 활용	MRO·지원함·기자재 시장
바이오·제약	MFN 약가의 로열티 영향 점검	미국 내 생산 거점 검토	중국 CDMO 대체 수요
철강	제품별 금속 함량· HS코드 세율 점검	현지 가공·생산, 시장 다변화	전력망·에너지· 조선용 고부가 강재

03 시기별 점검: 레임덕 회기에서 새 의회 출범까지

첫 분기점 선거 직후 레임덕 회기의 필수 법안 처리와 2027년 1월 제120대 의회 출범까지 약 3개월이 산업별 의사결정 시점

☑ 현 의회는 임기 종료 전 FY2027 예산과 국방수권법을 처리하며, 연내 무산된 법안과 예산은 새 의회에서 재논의[87]

☑ '모니터링 강화'에 그치지 않고 이벤트별 판단 기준과 의사결정 담당을 사전에 지정할 필요

표 3. 주요 Trigger Event와 결정 사항

일정	이벤트	관련 산업	결정 사항
2026.12.11	연방 임시예산 만료 (현 의회 처리)	조선·방산·에너지	셧다운에 따른 발주· 인허가 지연 대비
2026.12	국방수권법(NDAA) 최종안·국방예산 협상	조선·방산	함정 해외 건조 허용 범위·조선업 지원 확인
2026.12.31	반도체 투자세액공제(§48D) 착공기한	반도체	신규·추가 투자 착공 요건· 연장 입법 확인
2027.1.1	뉴욕 RAISE Act 시행	프런티어 AI	안전 프레임워크· 사고 보고 체계 점검
2027.1.3	제120대 의회 출범	전 산업	상임위 구성·청문회· 감독 우선순위 확인
2027.1.9	대중국 해양 Section 301 추가 유예 종료 가능 시점	조선·해운	항만수수료·관련 조치 재개 여부 반영
2027.4	제네릭·바이오시밀러 관세 제외 재검토	바이오·제약	관세 시나리오별 가격· 공급 전략 수립

자료: KOTRA(2026.10), Deloitte Insights

04 전사 공통 과제

정책 감지 체계 구축 연방 행정부·의회 상임위원회·주정부·전력규제위원회 동향을 함께 추적

☑ 진행 중인 조사·법안 → 시행 여부와 적용 범위 → 자사 수출·투자·공급망 영향 순으로 점검하고, 최종 법령과 실제 집행 내용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에 반영[88]

- 발의·검토 중인 정책과 실제 시행된 제도를 구분해 판단

미국 사업 구조 재점검 현지투자는 관세 부담 완화 수단일 뿐 면제 수단이 아니므로 생산지·협력사·조달 구조까지 점검

☑ HS코드·금속 함량·원산지 증빙을 제품 단위로 관리하고, 우려국 기업과의 지분·기술 라이선스·소재 조달 관계를 협력사 단계까지 확인

☑ 연방 세액공제와 주정부 투자보조금·재산세 감면·전기요금·인력지원 조건을 종합 비교해 투자 지역을 평가

- 출장·설치·시운전·교육·장기근무별로 체류 자격을 구분해 현지 인력 투입 계획에 반영

재무 회복탄력성 강화 정책 지연과 금리·환율 변동을 사업계획과 계약 구조에 미리 반영

☑ 고객사와의 장기 공급계약에 관세·세액공제 변동 조항을 반영하고, 시나리오별 설비투자(CAPEX) 집행 조건과 중단·재개 기준, 환헤지·달러 조달 전략을 재정비

주석

1. AP·NBC·Fox News, 2026 미국 중간선거 개표 집계(2026.11.8 미 동부시간 기준, 공식 인증 전) https://apnews.com/article/f126e12e05b579a327b98481c0ae2226
2. Fortune, “Voters ousted incumbents and flipped both chambers of Congress”, 2026.11.4 https://fortune.com/2026/11/04/voters-incumbents-republicans-congress-chambers-control-50-years/
3. BBC News 코리아, 「미 중간선거, 공화당이 참패한 5가지 이유」, 2026.11.5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rkg7w1n3pgno
4. U.S. Senate, “About Voting” https://www.senate.gov/about/powers-procedures/voting.htm
5. CNBC, “AI stocks and the Texas governor race: data centers”, 2026.11.4 https://www.cnbc.com/2026/11/04/ai-stocks-texas-governor-data-centers.html
6. Capital B Atlanta, “Georgia 2026 election results: winners in key races”, 2026.11.4 https://atlanta.capitalbnews.org/georgia-2026-election-results-winners-in-key-races/
7. Federal Reserve Bank of St. Louis(FRED), “10-Year Treasury Constant Maturity Rate”; 한국은행 ECOS https://fred.stlouisfed.org/series/DGS10
8. Reuters, “Nasdaq posts biggest daily drop in 19 months on fears of AI regulations”, 2026.11.5 https://www.reuters.com/markets/
9. Reuters, 미국 증시 마감 동향, 2026.11.6 https://www.reuters.com/markets/
10. TD Economics, 「Key Financial Forecasts」(2026.10.16), https://economics.td.com/domains/economics.td.com/documents/reports/bottom-line/tables/2026-10-16/us-table.htm
11. Reuters, “Trump's midterm drubbing demonstrates the power of data center opponents”, 2026.11.4(골드만삭스 분석 인용) https://www.reuters.com/world/us/trumps-midterm-drubbing-demonstrates-power-data-centre-opponents-2026-11-04/
12. The Korea Times, “US midterm ‘blue wave’ puts pressure on memory chip demand”, 2026.11.5(키움증권 분석 인용) https://www.koreatimes.co.kr/business/tech-science/20261105/us-midterm-blue-wave-puts-pressure-on-memory-chip-demands
13. The Korea Times, “Democrats' win could compound pressures on AI spending, Korean chipmakers”, 2026.11.4(한국은행 뉴욕사무소·미래에셋증권 분석 인용) https://www.koreatimes.co.kr/economy/20261104/democrats-win-could-compound-pressures-on-ai-spending-korean-chipmakers
14. U.S. Senate Committee on Finance, “Data Center Tax Package Discussion Draft: One-pager & Technical Summary”, 2026.10.23 https://www.finance.senate.gov/wp-content/uploads/2026/10/102326_data_center_tax_package_one-pager__technical_summary.pdf
15. KPMG, “Draft legislation proposes new tax rules for data centers”, 2026.11.2 https://kpmg.com/us/en/taxnewsflash/news/2026/11/kpmg-report-legislation-tax-rules-data-centers.html
16. Brookings Institution, “How the 2026 midterms could reshape data center policy”, 2026.11.4 https://www.brookings.edu/articles/how-the-2026-midterms-could-reshape-data-center-policy/
17. 뉴스1, 「美 중간선거 민주당 승리…코트라 “관세는 행정부 권한, 기조 유지될 듯”」, 2026.11.4

18. U.S. Senate Committee on Finance, “Crapo, Wyden Reaffirm Commitment to Extending Advanced Manufacturing Investment Credit”, 2026.8.5 https://www.finance.senate.gov/chairmans-news/crapo-wyden-reaffirm-commitment-to-extending-advanced-manufacturing-investment-credit/

19.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egal Sidebar LSB11398, “Supreme Court Rules Against Tariffs Imposed Under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2026.2.23 https://www.congress.gov/crs_external_products/LSB/PDF/LSB11398/LSB11398.1.pdf

20. KOTRA,「2026 미국 중간선거 전망과 통상·산업정책 영향 분석」, Global Market Report 26-070, 2026.10

21. Federal Register, “Rescission of the Greenhouse Gas Endangerment Finding and Motor Vehicle Greenhouse Gas Emission Standards Under the Clean Air Act”, 91 FR 7686, 2026.2.18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26/02/18/2026-03157/rescission-of-the-greenhouse-gas-endangerment-finding-and-motor-vehicle-greenhouse-gas-emission

22.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49361, “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 Standards”, 2026.9.24

23. IRS, Fact Sheet 2025-05, “FAQs for modification of sections 25C, 25D, 25E, 30C, 30D, 45L, 45W, and 179D under Public Law 119-21”, 2025.8.21 https://www.irs.gov/newsroom/faqs-for-modification-of-sections-25c-25d-25e-30c-30d-45l-45w-and-179d-under-public-law-119-21-139-stat-72-july-4-2025-commonly-known-as-the-one-big-beautiful-bill-obbb

24. KOTRA,「2026 미국 중간선거 전망과 통상·산업정책 영향 분석」, Global Market Report 26-070, 2026.10

25. 26 U.S.C. §45X, “Advanced Manufacturing Production Credit”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26/45X

26. IRS, Notice 2026-15, “Guidance Regarding Material Assistance from Prohibited Foreign Entities and Related Energy Credit Requirements”, 2026 https://www.irs.gov/pub/irs-drop/n-26-15.pdf

27. 산업연구원(KIET),「K-배터리, 위기인가 전환기인가: ESS를 중심으로 본 새로운 성장축의 모색」, 2026.8

28. 아시아경제, “U.S. Imposes 15% Tariff on Pharmaceuticals from Korea and Others... Biosimilars Exempt for One Year”, 2026.4.3 https://www.asiae.co.kr/en/article/2026040315351383650

29. Asia Business Daily, “U.S. Pharmaceutical Tariffs Take Effect: 15% on Korean Patent Drugs, Generics and Biosimilars Exempt”, 2026.9.29 https://www.asiae.co.kr/en/article/2026092918314899069

30. Baker McKenzie, “United States: The BIOSECURE Act Becomes Law”, 2026.1.19 https://www.bakermckenzie.com/en/insight/publications/2026/01/united-states-the-biosecure-act-becomes-law

31. Latham & Watkins, “BIOSECURE Act Becomes Law, Limiting Grants With Biotechnology Companies of Concern”, 2025.12.31 https://www.lw.com/en/insights/biosecure-act-becomes-law-limiting-grants-with-biotechnology-companies-of-concern

32. Latham & Watkins, “BIOSECURE Act Becomes Law, Limiting Grants With Biotechnology Companies of Concern”, 2025.12.31 https://www.lw.com/en/insights/biosecure-act-becomes-law-limiting-grants-with-biotechnology-companies-of-concern

33. 아시아경제, “U.S. Imposes 15% Tariff on Pharmaceuticals from Korea and Others... Biosimilars Exempt for One Year”, 2026.4.3 https://www.asiae.co.kr/en/article/2026040315351383650

34. HFMA, “ACA marketplace enrollment decline puts coverage affordability in focus”, 2026.6.29(HHS 자료·KFF 분석 인용) https://www.hfma.org/payment-reimbursement-and-managed-care/aca-marketplace-enrollment-decline/

35. Seoul Economic Daily, “Tariffs to Stay After U.S. Democratic Sweep, KOTRA Says”, 2026.11.5

36. The Korea Herald, “Democratic gains unlikely to derail Korea-US investment deal”, 2026.11.4

37.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RL32665, “Navy Force Structure and Shipbuilding Plans: Background and Issues for Congress”, 2026.1.20 https://www.congress.gov/crs_external_products/RL/PDF/RL32665/RL32665.427.pdf

38. USNI News, “Hanwha Philly Shipyard to Build Navy Landing Ship Mediums”, 2026.10.30 https://news.usni.org/2026/10/30/hanwha-philly-shipyard-to-build-navy-landing-ship-mediums

39. Naval News, “Hanwha Philly Shipyard Selected to Build US Navy Medium Landing Ship (LSM)”, 2026.10.30 https://www.navalnews.com/naval-news/2026/10/hanwha-philly-shipyard-selected-to-build-us-navy-medium-landing-ship-lsm/

40. Seoul Economic Daily, “Tariffs to Stay After U.S. Democratic Sweep, KOTRA Says”, 2026.11.5

41. Cozen O’Connor, “The SHIPS for America Act”, 2025.5.7

42. Center for Maritime Strategy, “Golden’s Amendment and the U.S.-ROK Shipbuilding Alliance”, 2026.6.17 https://centerformaritimestrategy.org/publications/goldens-amendment-and-the-u-s-rok-shipbuilding-alliance/

43. Rep. Jared Golden, “Golden presses leaders of Armed Services Committees to preserve NDAA language barring Trump from sending shipbuilding overseas”, 2026.10.29 https://golden.house.gov/media/press-releases/golden-presses-leaders-of-armed-services-committees-to-preserve-ndaa-language-barring-trump-from-sending-shipbuilding-overseas

44. USNI News, “Senate, House Defense Bills Propose Restrictions on U.S. Warships Built in Foreign Yards”, 2026.6.16 https://news.usni.org/2026/06/16/senate-house-defense-bills-propose-restrictions-on-u-s-warships-built-in-foreign-yards-legislation-limits-navy-secretarys-ability-to-rename-ships

45. PowerLines, “Utilities are Planning to Spend $1.4 Trillion on Capital Expenditures Through 2030 as Utility Bills Rise, Study Finds”, 2026.4.14

46. KOTRA,「2026 미국 중간선거 결과 및 시사점」, 2026.11.5

47. Wood Mackenzie, “Permitting Reform Is Likely Move for Democratic Controlled US Congress”, 2026.11.4

48. KPMG, “United States announces new rules for calculating Section 232 tariffs on steel, aluminum, and copper imports”, 2026.4.2 https://kpmg.com/us/en/taxnewsflash/news/2026/04/united-states-new-rules-calculating-section-232-tariffs-steel-aluminum-copper.html

49. KOTRA,「美 전력망 병목과 제232조 한시 인하, 한국산 전력 기자재엔 새로운 진입 동력 될까」, 2026.6.25

50. KOTRA,「美 실리콘밸리 AI 경쟁, 전력인프라로 확대…우리 기업의 기회와 진출 요건」, 2026.9.30

51. KOTRA,「美 실리콘밸리 AI 경쟁, 전력인프라로 확대…우리 기업의 기회와 진출 요건」, 2026.9.30

52. U.S. Embassy & Consulate in the Republic of Korea,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nounce Historic Strategic Investment Projects”, 2026.9.30 https://kr.usembassy.gov/100226-korea-and-the-united-states-announce-historic-strategic-investment-projects/

53. U.S. Department of Energy, “Department of Energy Announces American Nuclear Supply Chain Loans”, 2026.6.23 https://www.energy.gov/articles/department-energy-announces-american-nuclear-supply-chain-loans

54. U.S. Embassy & Consulate in the Republic of Korea,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nounce Historic Strategic Investment Projects”, 2026.9.30 https://kr.usembassy.gov/100226-korea-and-the-united-states-announce-historic-strategic-investment-projects/

55. U.S. Embassy & Consulate in the Republic of Korea,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nounce Historic Strategic Investment Projects”, 2026.9.30 https://kr.usembassy.gov/100226-korea-and-the-united-states-announce-historic-strategic-investment-projects/

56. Reuters, “How the Democratic sweep could change US energy policy”, 2026.11.4

57. IRS, Notice 2025-42, “Beginning of Construction Requirements for Purposes of the Termination of Clean Electricity Production Credit and Clean Electricity Investment Credit for Applicable Wind and Solar Facilities”, 2025.8.15 https://www.irs.gov/pub/irs-drop/n-25-42.pdf

58. AP, “Calling control of Congress in the 2026 midterm elections”, 2026.11.5

59. Reuters, “Democrats won Congress, but can they meet voters' demands”, 2026.11.6

60. AISI, “Steel Industry Urges President to Stand Strong on Section 232 Tariffs”, 2026.9.25

61. The White House, “Further Adjusting the Tariff Regimes for Imports of Aluminum, Steel, and Copper into the United States”, 2026.6.1

62. AISI, “Steel Imports Down 2.9% In September vs. August”, 2026.10.27 https://www.steel.org/2026/10/steel-imports-down-2-9-in-september-vs-august/

63. Steel Market Update, “US steel coalition seeks TRQ for South Korea amid import surge”, 2026.9.28 https://www.steelmarketupdate.com/2026/09/28/us-steel-coalition-seeks-trq-for-south-korea-amid-import-surge/

64. USTR, “USTR Initiates Section 301 Investigations Relating to Structural Excess Capacity and Production in Manufacturing Sectors”, 2026.3.11

65. U.S. Department of Commerce, “Circular Welded Non-Alloy Steel Pipe from the Republic of Korea: Final Results of Antidumping Duty Administrative Review”, 2026.11.5

66. worldsteel, “worldsteel Short Range Outlook October 2026”, 2026.10.12

67. 머니투데이, 「AI데이터센터, 철강도 살렸다... 하반기 실적 반등 청신호」, 2026.8.26

68. Reuters, “Trump's midterm drubbing demonstrates the power of data center opponents”, 2026.11.4 https://www.reuters.com/world/us/trumps-midterm-drubbing-demonstrates-power-data-centre-opponents-2026-11-04/

69. U.S. Department of Energy, “Financial Assistance Letter 2025-08: Buy America Requirement”, 2025.9.2

70. worldsteel, “September 2026 Crude Steel Production”, 2026.10.23

71. Hyundai Motor Group, “Hyundai Steel Celebrates Louisiana EAF Steel Mill Project Launch”, 2026.9.4 https://www.hyundaimotorgroup.com/en/news/hyundai-steel-celebrates-louisiana-eaf-steel-mill-project-launch-driving-growth-for-us-manufacturing

72. U.S. Census Bureau, “Preliminary: U.S. Imports for Consumption of Steel Products, September 2026”, 2026.10.27

73. 철강금속신문, 「[현대제철 IR-Q&A] 철강업황 부진 여전...주주환원책 발표 타이밍 아냐」, 2026.10.30

74. OECD, “OECD Steel Outlook 2026”, 2026.6.4

75. Seoul Economic Daily, “EU Slashes Steel Tariff-Free Quotas 46%, Korea Spared With 20% Cut”, 2026.6.30 https://en.sedaily.com/finance/2026/06/30/koreas-duty-free-steel-export-quota-to-eu-falls-20-percent

76. European Commission, “Price of CBAM Certificates”, 2026.10.5

77.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 Legal Sidebar LSB11398, “Supreme Court Rules Against Tariffs Imposed Under the 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IEEPA)”, 2026.2.23 https://www.congress.gov/crs_external_products/LSB/PDF/LSB11398/LSB11398.1.pdf

78. WilmerHale, “Supreme Court Strikes Down IEEPA Tariffs—What Now?”, 2026.2.20 https://www.wilmerhale.com/en/insights/client-alerts/20260220-supreme-court-strikes-down-ieepa-tariffs-what-now

79. U.S. Senate, “About Voting” https://www.senate.gov/about/powers-procedures/voting.htm

80. KOTRA, 「2026 미국 중간선거 전망과 통상·산업정책 영향 분석」, Global Market Report 26-070, 2026.10 https://www.kotra.or.kr/

81. U.S. Senate Committee on Finance, “Crapo, Wyden Reaffirm Commitment to Extending Advanced Manufacturing Investment Credit”, 2026.8.5 https://www.finance.senate.gov/chairmans-news/crapo-wyden-reaffirm-commitment-to-extending-advanced-manufacturing-investment-credit/

82. IRS, Notice 2026-15, “Guidance Regarding Material Assistance from Prohibited Foreign Entities and Related Energy Credit Requirements”, 2026 https://www.irs.gov/pub/irs-drop/n-26-15.pdf

83. 아시아경제, “U.S. Imposes 15% Tariff on Pharmaceuticals from Korea and Others... Biosimilars Exempt for One Year”, 2026.4.3 https://www.asiae.co.kr/en/article/2026040315351383650

84. USNI News, “Senate, House Defense Bills Propose Restrictions on U.S. Warships Built in Foreign Yards”, 2026.6.16 https://news.usni.org/2026/06/16/senate-house-defense-bills-propose-restrictions-on-u-s-warships-built-in-foreign-yards-legislation-limits-navy-secretarys-ability-to-rename-ships

85. KOTRA,「2026 미국 중간선거 전망과 통상·산업정책 영향 분석」, Global Market Report 26-070, 2026.10(미 로렌스버클리국립연구소 전망 인용) https://www.kotra.or.kr/

86. KPMG, “United States announces new rules for calculating Section 232 tariffs on steel, aluminum, and copper imports”, 2026.4.2 https://kpmg.com/us/en/taxnewsflash/news/2026/04/united-states-new-rules-calculating-section-232-tariffs-steel-aluminum-copper.html

87. KOTRA,「2026 미국 중간선거 전망과 통상·산업정책 영향 분석」, Global Market Report 26-070, 2026.10. https://www.kotra.or.kr

88. KOTRA,「2026 미국 중간선거 전망과 통상·산업정책 영향 분석」, Global Market Report 26-070, 2026.10 https://www.kotra.or.kr/

앱

Download on the App Store

GET IT ON Google Play

카카오톡 채널

'딜로이트 인사이트' 앱과 카카오톡 채널에서
경영·산업 트렌드를 만나보세요!

Deloitte.

Deloitte Insights

세일즈&마케팅 리더
권지원 대표
jekwon@deloitte.com

성장전략부문 Deputy 리더
서정욱 부대표
juseo@deloitte.com

Contact us
krinsightsend@deloitte.com

Deloitte refers to one or mor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DTTL (also referred to as “Deloitte Globa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which cannot obligate or bind each other in respect of third parties. DTTL and each DTTL member firm and related entity is liable only for its own acts and omissions, and not those of each other. DTTL does not provide services to clients. Please see www.deloitte.com/about to learn more.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is a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nd a member firm of DTTL. Members of Deloitte Asia Pacific Limited and their related entities, each of which are separate and independent legal entities, provide services from more than 100 cities across the region, including Auckland, Bangkok, Beijing, Hanoi, Hong Kong, Jakarta, Kuala Lumpur, Manila, Melbourne, Osaka, Seoul, Shanghai, Singapore, Sydney, Taipei and Tokyo.

This communication contains general information only, and none of Deloitte Touche Tohmatsu Limited (“DTTL”), its global network of member firms or their related entities (collectively, the “Deloitte organization”) is, by means of this communication, rendering professional advice or services. Before making any decision or taking any action that may affect your finances or your business, you should consult a qualified professional adviser.

No representations, warranties or undertakings (express or implied) are given as to the accuracy or completeness of the information in this communication, and none of DTTL, its member firms, related entities, employees or agents shall be liable or responsible for any loss or damage whatsoever arising directly or indirectly in connection with any person relying on this communication. DTTL and each of its member firms, and their related entities, are legally separate and independent entities.

본 보고서는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받는 저작물로서 저작권은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저작권자”)에 있습니다. 본 보고서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만 이용이 가능하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상업적 활용 기타 영리목적 이용시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이 필요합니다. 또한 본 보고서의 이용시, 출처를 저작권자로 명시해야 하고 저작권자의 사전 허락없이 그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 2026. For information, contact Deloitte Anjin LLC